

K-배터리, 脫중국 속도낸다 국산화 등 자체 공급망 강화

美 IRA 대응책 마련 분주
中 JV 지분율 조정 불가피
소재 국산화 업체 호재 전망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높인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해당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만큼 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기업들이 IRA FEOC 세부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기업(JV)을 FEOC로 간주하는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번 IRA FEOC는 중국 기업의 ‘직접 지배’에 대한 해석 범위도 비교적 넓게 적용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FEOC 기준에 해당되면 최대 7500달러인 IRA 전기차 보조금(최대 7500만 달러)을 받지 못한다. FEOC 기준은 부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핵심광물에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LG화학, SK온 등 국내 주요기업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새만금 전구체 생산 기지가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로 교차점 /뉴시스

국내 기업들은 IRA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계 최대 핵심 광물 보유국인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광물을 사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중국 기업과 JV를 설립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LG화학은 지난 4월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LFP 양극재 합작공장도 짓는다.

LG엔솔은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모로코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MOU를 맺었으며, 화유코발트와는 중국내 첫 한중 합

작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IRA FEOC 세부규정을 고려해 양사는 지분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GEM)와 전북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도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6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CNGR 지분율이 80%에 육박해 북미 투자를 위해서는 양사의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IRA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고민한 만큼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맞출 수 있다”면서도 “생산과정에서 중국 비율을 낮추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소재와 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중국과의 협력을 최소화하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국내 기업엔 이번 발표가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및 소재의 탈중국 기조 가운데 소재를 국산화한 업체에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며 LS와 고려아연의 경우 중국 자원이 개입하지 않은 배터리 밸류체인 구성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환율 1.8원 하락
코스피가 전 거래일(2505.01)보다 9.94포인트(0.40%) 오른 2514.95에 장을 마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27.24)보다 1.28포인트(0.15%) 상승한 828.52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05.8원)보다 1.8원 내린 1304.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임원부터 조직도까지 쇄신 예상

» 1면 ‘서든데스 경고 최태원’서 계속

특히 박정호 부회장은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ADT캡스 등 중요한 M&A를 이끌어오며 최태원 회장 ‘복심’으로 평가받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경영을 겸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대식 부회장은 2020년부터 그룹 최고 결정 조직인 수펙스를 이끌어왔고, 장동현 부회장도 SK(株)가 투자전문 지주사로 혁신하는데 기여했다. 김준 부회장 역시 오랜 기간 에너지 사업을 맡아오며 배터리 등 미래 사업을 육성하는데 공헌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영 위기에서는 이같은 성과가 독이 됐다.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낸드사업부(현 솔리다임)가 시황 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며 SK하이닉스 실적을 끌어내린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해외 배터리 투자로 그룹사 전체 채무 부담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SK월더스 상장 실패와 SK온 상장 지연 및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책임론도 대두된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CEO 세미나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해진다. 일찌감치 ‘신상필벌’을 고민하고 있었던 셈이다.

◆ 누가 자리 대신하나

일각에서는 부회장단이 오랜 성공 경험을 쌓아온 만큼,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체할만한 경영자가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대식 부회장이다. 부회장단에 함께 물러나자고 설득하고 있다는 소문도 이같은 상황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SK수펙스 의장으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창원 부회장이 아직은 승낙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SK 서린사옥 전경

최창원 부회장은 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 장남인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은 2000년 작고했고, 둘째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다.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디스커버리는 SK그룹과는 지분 관계를 거의 해결한 사실상 별개 지주사다. 최창원 부회장이 보통주 40.18%, 최태원 회장이 0.11%만 보유하고 있다. SK케미칼을 인적분할하며 지배구조를 개편했으며, 주요 계열사는 SK플라즈마와 SK가스, SK디앤디 등이다.

다만 SK디스커버리는 SK그룹과 끈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계열 분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으며, 수펙스에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최창원 부회장이 수펙스 의장으로 올라서면 SK그룹은 ‘사촌경영’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최창원 부회장이 올 초 SK디스커버리 계열사들과 사업을 논의하는 4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수펙스와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라고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강조했다. 수펙스 의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 임원 대거 ‘물갈이’ 전망

재계에서는 이어서 젊은 경영자들이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맡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58세인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단독 대표로 올라서고, 59세인 박상규 SK엔무브 사장이 SK이노베이션을 총괄하는 등이다. 투자전문회사인 SK(株)가 계열사들과 중복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줄이고, 59세인 SK실트론 장용호 사장이 대표를 맡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영자뿐 아니다. SK그룹에서는 올해 인사를 통해 임원이 대거 ‘물갈이’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임원 중 30%와 계약을 종료하고, 10%를 신규 임원으로 채우는 대대적인 개편도 점치고 있다. 전체 임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승진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직도 역시 크게 바꾸려는 분위기다. 이미 여러 계열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와 승진 조치를 끝낸 상황, 보직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7월 예정된 임원 인사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인사는 더욱 비밀리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전에는 인사 발표 전 일부 임원이 해임 통보를 받고 신변을 정리하는 등 움직임이 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그럴다할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김재용 기자 juk@

“변화하는 中 시장… 韓, 수출구조 개선해야”

소비·첨단산업 중심 성장구조 전환
“기술개발 통해 대외경쟁력 높여야”

중국이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소비·첨단산업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존과 같은 대중(對中)수출 실적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며 중간재 수요가 줄고, 중국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며 자국에서 만드는 중간재로도 그 수요를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품 비중을 확대하고,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경쟁전망 핵심이슈: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 부문 개발에서 벗어나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 中 성장구조 전환

중국이 성장구조를 전환한 이유는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과잉돼 부채가 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기준 중국의 자가주택보유율은 90% 수준으로, 미분양 규모는 전국적으로 720만채에 이른다. 주

택가격은 누군가 높은 가격으로 사줄 때 상승할 수 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이들(수요)이 줄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 투자금액의 부실가능성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감소)을 추진하고, 성장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섬유·의류·컴퓨터 등 기존산업은 축소하고, 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정책지원을 강화했다.

현재 중국은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태다. 올해 9월말까지 자동차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이 349만대, 일본이 319만대, 독일이 244만대로 중국이 가장 많다. 이차전지 및 태양광의 글로벌 점유율도 각각 62.9%, 80~95%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 韓, 중국 특수 없어… 소비재 수출 비중 확대

이날 한은은 중국이 성장구조를 전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 수출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며 수입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기술개발 등으로 중간재 수입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기 때

이다.

김보성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은 주변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최종수요가 자국내 부가가치 유발비중은 2018년 86.6%에서 2020년 87.3%로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최종수요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같은 1.2%에서 1.0%로 하락했다. 지금까지 중국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중국은 부동산 등 과잉투자가 축소되면서, 소비시장으로 중심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